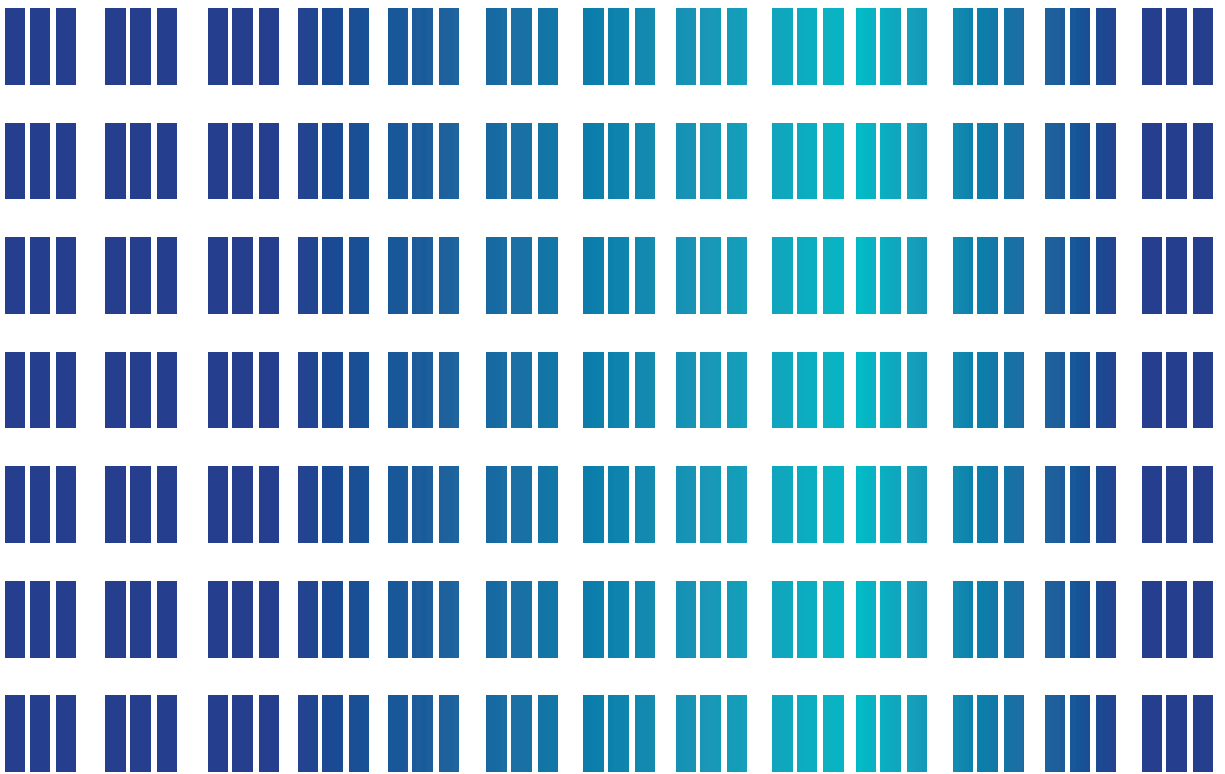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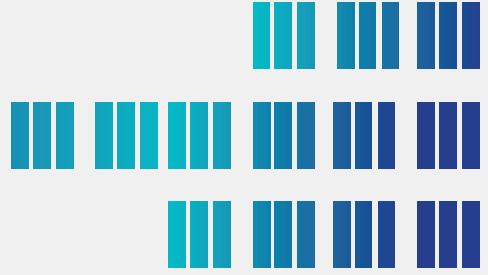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Digital Safety Report 참간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Digital Safety Report



Contents

About KICI

Digital Safety Report 발간사

KICI 원장 백운일

KICI 디지털안전본부

Digital Safety Report

01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의 중요성

KICI 최지은 본부장

02 디지털 재난의 경제적 피해와 정책 대응 방향

호서대학교 곽정호 교수

03 경북 지방 대형 산불로 인한 통신재난 대응

04 디지털 안전 관제 이슈

05 Digital Safety Inside



Digital Service Safety

안정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場을 만들겠습니다.

KICI 원장 백운일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디지털 재난·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국가 경제 및 안보 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과거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고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카드 POS기 및 업무용 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등을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 복구와 보상 등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서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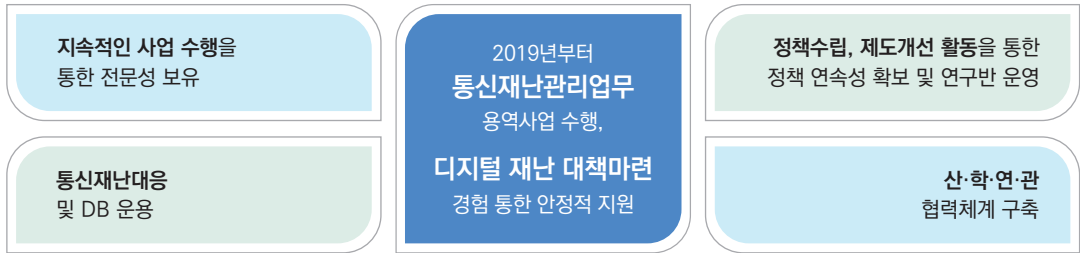
이러한 화재 등의 사회재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디지털 재난·장애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태풍, 지진, 홍수, 집중호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디지털 경제시대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국민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국민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인 안정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는 기간·부가·IDC 사업자,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규제개선,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들이 활성화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디지털 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場인 ‘Digital Safety Report’를 발간하여,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정보통신, 건축, 소방, 전기, 정책, 법제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본 창간호 이후 매월 발간되는 ‘Digital Safety Report’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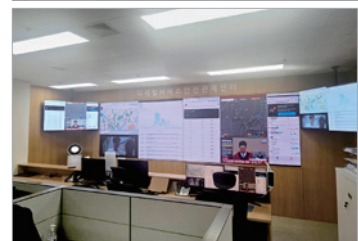
KICI 디지털안전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내 디지털안전본부(본부)는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안전 관련 용역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디지털안전본부에서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분야의 디지털안전 전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걸쳐, 과기정통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안전관리실이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디지털안전관제센터가 있다.

본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법률을 근거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데이터센터-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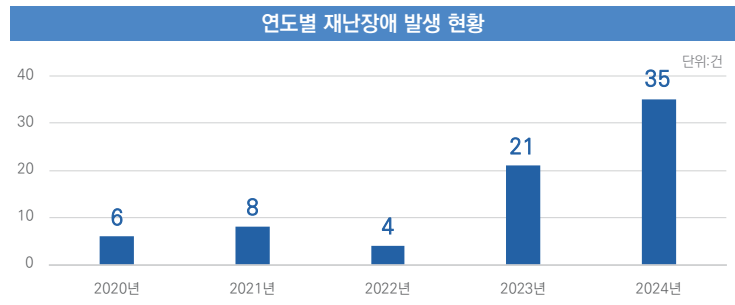


01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의 중요성



KICIT 디지털안전본부
최지은 본부장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KICIT('24.12.) 통신재난 및 장애사례 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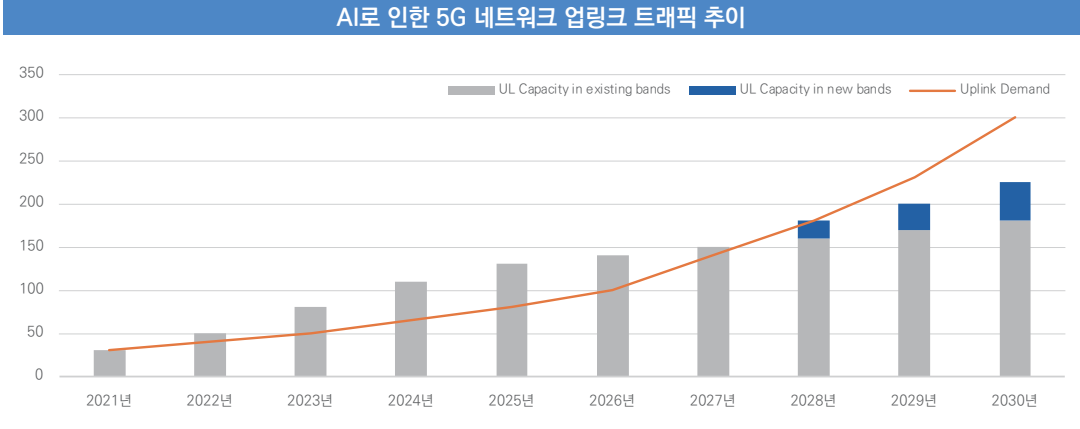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와 복합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더 증가할 것이라 예견되며, 디지털 재난·장애를 막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는 기간망, IDC, 클라우드, 플랫폼, 응용서비스 등 다양한 계층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사업자 중 한 곳에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게 디지털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4년 MS발 '세계 IT대란'으로 전세계 디지털 서비스 마비로 교통, 금융, 상거래 등 경제 전반이 마비되었다. 한 사업자의 장애 발생이 전세계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빠른 우리나라에서 MS발 사이버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이 보편화되면서 교통, 의료, 교육, 금융 등 주요 경제·사회 활동에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다. AI 활용으로 인터넷 트래픽은 과거와 다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발생을 모바일 엑스퍼츠 보고서는 우려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서 야기된 디지털 재난·장애의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재난·장애를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모바일 엑스퍼츠(Mobile Experts), 2024. 08.

이렇듯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의 디지털 재난·장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재난·장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법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회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재해·재난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본 법은 디지털 안전 3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혼재되어 있던 디지털 재난·장애 관련 조문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R&D 지원, 전문인력양성, 원인조사 및 복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디지털 재난·장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합법 제정·시행을 위해 우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T)의 디지털안전본부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KICT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더 키워나갈 것이다.



02 디지털 재난의 경제적 피해와 정책 대응 방향



호서대학교 빅데이터시학부
곽정호 교수/ 경영학 박사

1. 문제 제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실시간 금융 거래, 원격 근무와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행정민원, 금융 거래, 의료예약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사회 모든 영역이 디지털망에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망 장애, 사이버 공격,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표적으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는 디지털 재난이 일상생활을 넘어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위험성을 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각인 되었다.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사회 기능과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심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조차도 금융, 유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피해를 유발하며, 국민의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디지털 재난 유형과 경제적 피해

디지털 재난이 단순 기술적 오류나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심대한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다수 재난은 단순한 사고로 미미한 수준의 피해에 그치나, 통신망 장애, 사이버 공격, 데이터센터 화재, 장비 고장, 자연재해 및 인적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재난은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그 여파가 국민의 삶의 질, 기업의 경영 안정성, 국가의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래의 표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어떤 경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 피해 유형 | 주요 내용 |
|-------------------|----------------------------------|
| 국민 생활의 직접 피해 | 결제 시스템 정지, 병원 진료 불가, 교통 혼잡 등 |
|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 | 스마트 공장, 유통 물류, 원격근무 등 생산활동 중단 |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손실 | 카드 결제 중단, 예약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일매출 손실 |
| 금융시장 불안정 및 투자 위축 | 주가 하락, 금융 거래 마비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
| 브랜드·기업 신뢰도 하락 | 통신사, 플랫폼 기업의 장애 반복 시 기업 이미지 손상 |
| 장기적 GDP 및 고용시장 영향 | 재난의 반복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한편, 국내에서 디지털 재난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와 더불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의 화재를 들 수 있다. 두 사건은 각각 70억 원, 275억 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기록하며 디지털 재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경북 산불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네트워크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안에 따라, 국가 차원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다른 나라의 대응방식

초연결 사회에서의 디지털 재난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 기반 보호 차원의 전략적 관점에서 디지털 재난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대응 수준을 넘어, 법 제도 정비, 전담기관 운영, 첨단 기술 기반 감시체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1) 미국: FCC 디지털 재난의 적시 대응체계

미국은 디지털 재난 대응을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복원력 확보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보고(NORS)를 의무화하여 초기 통보부터 최종 보고까지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2022년부터는 로밍 협정, 자산 공유, 지방정부 연계 등 민관 협력 기반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재난 시에는 FCC의 DIR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복구 정보가 공유되며, 이후 사후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다.



(2) 유럽연합(EU): NIS2 지침

EU는 2016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NIS Directive)'을 제정한 데 이어, 2023년부터 강화된 'NIS2 Directiv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EU 전역의 통신, 금융, 교통, 보건 등 핵심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이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각국 정부에는 중앙 통제기관의 설치와 EU 간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특히 각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를 운영하여 신속한 기술 지원과 재난 복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중심 통합대응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발생 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법령과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는 총무성과 디지털청이 협력하여 디지털 재난에 대응하는데, 정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정기적인 재난 모의훈련 및 복구 시나리오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이상 감지 시스템을 전국 데이터센터에 도입해 사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디지털 재난을 단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과제로 인식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법제도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능력을 체계화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디지털 재난의 유형과 경제적 피해, 주요 국가의 정책 대응 등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재난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재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기술 오류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반의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망 마비나 데이터센터 장애는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산업 전반, 금융시장, 공공영역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는 단순한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디지털 재난을 사후적인 조치로 해결하기에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사전적인 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즉, 반복되는 디지털 재난이 국가 신뢰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측 기반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처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경고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해결도 모색해야 한다.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해 디지털 안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예방 정책 수립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대응까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단순히 기술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에 회복력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참고문헌]

1. 강정수 외(2021). 「한국의 디지털 기반사회에서의 재난관리 전략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실(2024.9.22.). 「디지털 재난과 통신안전법 제정 관련 정책자료」.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사이버 재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한국인터넷진흥원(2023).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5.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3). Network Outage Reporting System (NORS) and Disaster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DIRS) Guidelines. Washington, DC: FCC.
6.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 (2023). NIS2 Directive: Enhancing Cybersecurity Across the EU. Athens: ENISA.
7. 総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2022). 『サイバー防災基本計画 (Cyber Disaster Prevention Master Plan)』. 総務省.



03 경북 지방 대형 산불로 인한 통신재난 대응

1. 현장 대응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번진 ‘괴물 산불’은 지난 3월 28일에서야 주불이 잡히면서 역대 국내 산불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기고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로 인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주택 3,000여동이 전소되고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번 ‘괴물 산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시설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3월 25일 19시 19분에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3월 27일 오후 10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였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으로 과기정통부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였다. 현장지원반은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누었으며,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원 안내반은 유·무선 서비스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안내하였다.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온 이번 산불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마비로 인한 제2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복구에 실시간 대응하였다. 과기정보통신부의 신속한 통신재난 대응으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2일 만인 30일 19시 기준 무선통신은 90.5%, 유선통신은 98.5%, 유료방송은 98.8%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산불 현장에서 긴급구조, 산불진화 등을 위한 무선·유선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출처] 밤낮 없이 불타는 안동 산불 (뉴스핌, 2025.3.25., <https://m.newspim.com/slide/view/41029>)



[출처] 산불 피해 유선 통신 방송 98% 복구...유상임 과기장관 현장 점검(뉴스시스, 2025. 3.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0589>)



2. 디지털 장애 피해복구 현황

| 용어 | 3.28일 (금) | 3.29일 (토) | 3.30일 (일) | 3.31일 (월) |
|------|-----------|-----------|-----------|-----------|
| 무선통신 | 83.4% | 88.5% | 90.5% | 95.1% |
| 유선통신 | 94.9% | 98.4% | 98.5% | 98.9% |
| 유료방송 | 93% | 98.8% | 98.8% | 98.8% |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25. 4.

이번 대형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하여 KIC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과기정통부에 상황대응 보고를 진행하였다.

3. 방송통신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KIC의 상황대응

2025.03.25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발령('관심'에서 '주의'로)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현황 6시간 간격으로 과기정통부에 보고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우회소통 대책 마련, 긴급복구조 대기 등 긴급 복구 준비 실시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 모니터링 강화, 비상근무체계 가동

2025.03.27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현황 4시간 간격으로 과기정통부에 보고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인근 기지국 출력상향, 이동기지국 및 비상전원(소형발전기 등) 배치, 우회소통 대책 마련, 긴급복구조 대기 등 긴급 복구 준비 실시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 모니터링 강화, 비상근무체계 가동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재난와이파이 개방 및 재난로밍 가동 준비 확인

2025.03.25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하향 발령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현황 6시간 간격으로 과기정통부에 보고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우회소통 대책 마련, 긴급복구조 대기 등 긴급 복구 준비 실시
- KIC: 주요통신사업자의 피해/복구 모니터링 강화, 비상근무체계 가동



04 디지털 안전 관제 이슈



2025.04.01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2025.04.03

탄핵선고 관련 서울 '을호비상', 대규모 집회 및 시위 등에 따른 방송통신 재난 대비 비상근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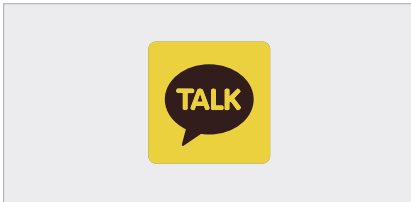


2025.04.03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2025.04.04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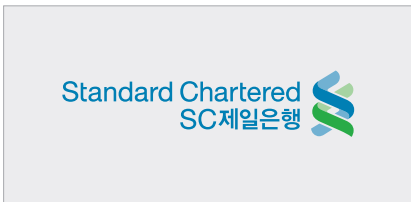
2025.04.04

카카오톡 메시징 장애(PC, 모바일)



2025.04.04

다음카페 모바일 앱 접속 장애



2025.04.25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장애



05 Digital Safety Inside

디지털 재난관리 업무 주요내용

2025.03.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디지털재난관리업무 위탁 용역사업” 계약 체결
(2025.03.31. 정보통신신문 기사화)

01 디지털 재난 예방활동 강화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관련
- 안정적인 전원공급 확보현황 조사
- 재난대비현황 조사
- 통신구 관련 기반시설 실행계획 검토 지원
-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 담당자 및 비상연상체계 현행화
- 디지털 재난 관련 정복 지원

02 디지털 재난 대비능력 향상 지원

-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 강화 지원
- 통화량 급증 대응 계획
- 긴급복구자원 확보 관리

03 신속한대응 및 복구능력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04 사후관리를 통한 재난관리 향상

- 디지털재난 및 장애사례 분석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
- 디지털 재난 상황관리 지원

05 디지털 재난관리 법률 검토 지원

-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고시 제정안 마련 지원
- 디지털 재난관리 관련 법률 검토 및 법률 자문가 자문 등 개정 지원

06 디지털 재난관리 연구반 구성 운영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반 운영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25.03.25. 2025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점검 실시



KiCi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12번길 80(천천동)

TEL. 031-231-3400 FAX. 031-269-5210

www.kici.re.kr